

近代化過程에서의 經濟發展과 社會發展

趙

淳*

우리나라는 1960年代부터 經濟發展에 全力을 기울여왔다. 第三共和國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政府의 政策은 經濟를 焦點으로 구상되고 執行되어 왔다. 民間의 日常生活에 韓國人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經濟를 중요시하고 있다. 韓國人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國民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긴 勤勞時間을 甘受하고 있다. 이 點에 있어서는 韓國人도 어떤 外國人에 비해 遜色이 없는 經濟的 動物이라고 할만하다. 政府의 政策도 「經濟第一主義」이고 民間의 生活도 「經濟第一主義」이다. 政府는 經濟를 가지고 統治의 基盤으로 삼는 듯하고 民間은 經濟를 價値觀의 首位에 놓은 듯하다.

近來, 우리나라는 멀지 않아서 先進圈으로 進入하게 되리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見解의 根據도 우리나라의 國民所得의 높은 成長率에 있다. 이 見解도 經濟爲主의 價値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 最近들어 우리나라에서는 所得分配에 관한 觀心이 政府周邊에 있어서나 學界에 있어서는 상당히 高潮되고 있다. 이 관심은 韓國經濟의 問題點이 主로 所得分配의 不平衡에 있다고 보고, 所得分配가 좀 더 衡平하게만 된다면, 韓國은 理想的으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期待를 反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期待 역시 所得이라는 經濟變數에 思考의 焦點을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역시 經濟를 우선하고 있다.

經濟를 至上視하는 經濟第一主義의 思考에는 물론 取할만한 點도 있다. 오직 經濟만을 追求함으로써 國家나 個人은 에너지의 分散을 막고 國民所得의 빠른 增加를 가지고 온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經濟第一主義의 思考에는 短點도 있다. 그것은 經濟만 잘 하면 다른 것은 모두 自動적으로 잘될 것이라는 安逸한 觀念 위에 서 있는데, 人間에게는 個人에 있어서나 社會에 있어서나 經濟 이외에도 重要的 要素가 많이 있

*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는 것이다. 本稿의 目的은 한 나라의 經濟發展은 近代化의 過程에서 일어나는 社會全體의 變革이라는 文脈에서 고찰해야 하며, 따라서 國民經濟의 進路를 모색함에 있어서도 經濟만을 至上視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近代化의 過程을 마친 各國의 경험을 통하여 考察함에 있다.

本稿는 「學術的」인 論文은 아니고, 歷史와 社會에 관련된 넓은 領域에 關한 門外漢의 觀察을 收錄한데 지나지 않는다. 本稿에서 主張하는 많은 內容은 史實과 論理에 엄밀히 照明될 때 여러가지 瑕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拙文이 하나의 問題의 提起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I

슈페터가 그의 『經濟成長理論』에서 말한 바와 같이 「社會現象은 하나의 統一的 現象」이다. 물론, 經濟學徒인 우리는 經濟分析을 하기 위하여는 經濟事象을 餘他的의 社會事象으로 부터 「억지로」(gewaltsam)抽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經濟發展의 問題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思考는 이러한 抽象에만 始終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抽象의 前提가 되는 社會與件은 不斷히 變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一國의 國濟發展은 「近代化」라는 보다 큰 社會變動의 脈絡에서 考察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經濟發展의 問題는 歷史的인 視角에서 考察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人類가 地球上에 出現한 이래, 가장 幅 넓은 宇宙的인(global)運動이라고 할 수 있는 「近代化」運動의 本質은 무엇인가, 그것은 政治的으로는 市民革命을 통한 專制主義的인 王權으로 부터의 離脫, 즉 民主主義의 成就와 經濟的으로는 產業革命을 통한 產業社會의 達成을 그 內容으로 한다. 한마디로 近代化란, 政治的으로는 民主化, 社會的으로는 市民化, 그리고 經濟的으로는 產業化의 過程을 포괄하며, 이 中 어느 하나만을 指摘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이러한 近代化와 資本主義의 勃興은 英國에 있어서는 順調롭고 平坦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事實은 전혀 그렇지 않다. 近代化라는 것은 社會全般에 걸친 根本的인 變革을 수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變革은 既存의 慣習이나 秩序로부터의 脫皮를 의미함으로, 그것은 항상 既存의 權威와의 충돌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英國이라고 해서 平坦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그것은 思想面에 있어서나 實際에 있어서나 여러가지 革命을 거쳐, 겨우 이루어졌다. 近代化는 英國에 있

어서 조차, 難産이었다.

다른 모든 社會的 大變革에 있어서도 그렇다시피, 英國의 近代化도 그것을 先導하는 理論을 필요로 했다. 가장 著名한 理論을 들자면 J.록(John Locke)의 『統治論』에 있어서의 人權思想, 人民主權論, 三權分立論, 抵抗權論 등을 主軸으로 하는 近代民主主義思想과 A.스미스(Adam Smith)의 『道德感情論』과 『國富論』의 古典的인 自由經濟理論을 들 수 있는데 兩者는 다 같이 黎明의 새時代를 先驅하는 革命的 理論이었다. 보통 「스미스」의 理論은 調和와 樂觀을 강조하면서 革命的인 側面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道德感情論』에서 同感의 德을 強調한 것은 一種의 市民社會의 理論이라는 點에서, 그리고 『國富論』은 重商主義的인 國家의 經濟統制를 철저하게 批判한 點에서, 革命的인 要素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英國의 市民革命은 17世紀의 清教徒革命, 그리고 J.록으로 하여금 多年間 大陸에 亡命하게 한 名譽革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런 革命은 프랑스의 大革命이나 美國의 獨立戰爭보다 덜 劇的이기는 하였으나 그 內容에 있어서는 다 같은 性格을 가진 큰 革命이었다. 이러한 市民革命과 18世紀 後半에 始發한 産業革命이 結合하여 英國의 近代化가 이루어진 것이다. 英國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市民革命이 産業革命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에 있어서도 近代化의 過程은 英國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近代社會를 豫告하는 思想이 開花한 후, 프랑스大革命이라는 市民革命이 있었고, 그後 19世紀에 들어서서 産業革命이 開發함으로써 近代化가 이루어졌었다.

II

英國과 프랑스에서 起爆한 近代化運動은 19世紀 後半에는 獨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美國 및 日本으로 飛火하였다. 獨逸과 日本에 있어서는 上記한 兩大革命(市民革命과 産業革命)도 英·佛에 있어서와는 다른 樣相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産業革命은 無難히 이루어졌으나, 市民革命은 完全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政治·經濟에 걸쳐, 獨逸의 發展은 英·佛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당시의 後進國이었던 獨逸에 있어서는 完全한 의미에 있어서의 市民革命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第2次 世界大戰에 의해 敗戰한 후에 聯合國에 의해 他律的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政治理論이나 經濟理論에 있어서도 위에서 言及한 록이나 스미스에 比肩할 만한 思想이 出現하지 않았다. 비스마르크에 의한 統一後에도 立憲政治란 말 뿐이고, 그 內容에 있어서는 獨逸은 專制主義에 가까웠다. 비스마르크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制限的인 社會保障制度를 採擇하여, 社

會階級間的 對立을 援和하려고 試圖했으나, 結果的으로는 이것이 階級間的 對立을 激化시키고 마르크스流의 社會主義運動을 強化시켰다. 빌헬름 二世는 民主主義 따위에는 何等の 관심이 없었고, 議會는 'Talking Shop' 라는 말로 嘲笑의 對象이 되고 있었다. 大地主와 高級官僚과 結合된 軍隊의 힘은 莫強하였다.

第1次大戰의 末期에 일어난 獨逸革命으로 帝政獨逸은 崩壞하고 大戰이 終熄되고 바이마르共和國이 成立되었다. 이 革命은 勞働者階級을 主體的인 推進力으로하여 權威主義的인 帝政을 打倒하는데 成功함으로써 일단 初期의 民主主義革命을 달성하는데 成功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革命은 容커階級을 廢絶시킬 수 없었고, 從來의 支配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의미에서 未完成的인 것이었다. 결국 獨逸의 支配階級은 戰間期에 되살아나서, 國家社會主義의 旗幟下에 히틀러에 奉仕하면서 다시 2次大戰을 勃發시키는데 寄與했던 것이다. 獨逸은 비록 西歐 文明圈에 屬하여 英·佛과 隣接하여, 新時代의 흐름을 쉽게 受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一次大戰이라는 空前의 慘禍를 겪었음에도 不拘하고, 끝내 완전한 市民革命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經濟理論에 있어서도 獨逸은 철저한 自由經濟理論家를 배출하지 못했다. 獨逸의 歷史學派는 마샬(Alfred Marshall)이 그의 『經濟學原理』에서 많은 稱讚을 했을 정도로 經濟學의 발전에 寄與하기는 했으나, 이 學派는 經濟理論의 普遍 妥當性을 否認하고, 獨逸國家의 이익을 위해 經濟에 대한 國家의 統制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끝내는 獨逸의 傳統的인 國家主義에 奉仕하는 役割을 수행했다.

獨逸에는 처음부터 自由貿易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個人主義, 自由競爭의 傳統이 없었으며, 地主와 貴族의 影響力을 牽制하는 社會集團은 없었다. 一次大戰前에는 獨逸의 容커貴族(Junkers)과 官僚貴族 및 新興資本家の 地緣, 血緣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었고, 이들의 영향력 밑에 있는 大企業은 縱橫으로 合併하고 그 結果, 英·美에서 볼 수 없는 정도의 產業의 集中이 일어났다. 이들은 自由貿易은 眼中에 없었고, 新重商主義的인 貿易의 統制를 통하여 海外에 대한 獨逸의 進出을 위하여 全力을 기울였다. 히틀러 執權 이후로는 企業은 더욱 더 集中度를 더하여, 國家社會主義에 奉仕했다. 實로 獨逸에 있어서는 重商主義 時代로부터 히틀러-샤흐트(Schacht)時代에 이르기까지 自由貿易도 自由競爭도 없었다.

經濟學者 거센크론(A. Gerschenkron)은 獨逸, 그리고 러시아 등의 經濟發展을 例로 들면서 後進國일수록 그 發展速度는 빠르다는 有名한 理論을 내놓았다. 그의 理論은 後進國은 技術을 自力으로 開發할 필요가 없고, 이미 개발된 技術을 借入할 수가 있기 때문에, 先進國보다도 產業化의 速度를 促進할 수 있다는 것을 內容으로 한다. 거

센크론의 理論에는 물론 一理가 있다.

그러나 거센크론의 理論은 말하자면 一種의 「後發資本主義國家의 産業革命論」으로서, 經濟史學者인 그는 물론 歷史的인 視角을 떠나지는 않고 있으나, 위의 産業革命論을 近代化의 一環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理論—그 自體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나—은 近代化의 또 하나의 側面, 市民革命의인 側面은 捨象되고 있다. 거센크론은 그의 理論을 實證하는 歷史的 事實으로 주로 19世紀 中葉의 유럽의 後發資本主義國이었던 獨逸을 들었고 그것을 1890年代의 러시아 및 그 밖의 나라들에 類推하고자 했다. 그는 先進國이었던 英·佛에서 시작된 産業文明은 獨逸이나 그밖의 西洋文明圈에 속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外來文明이 아니었으므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나라들의 經濟發展에는 社會的 變化를 考慮할 필요가 切實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英·佛과 獨逸의 社會에는 상당한 質的인 差異가 있었다. 獨逸은 거센크론이 指摘한 바와 같이 비록 借入한 技術을 가지고 産業的으로는 短時日內에 英·佛을 따라잡을 수 있었으나, 「近代化」라는 見地에서 보면 文化自體는 借入할 수 없었다는 그것이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獨逸은 經濟的, 技術的으로는 超近代의인 國家가 되기는 하였으나, 政治·社會的으로는 2次大戰이 끝날 때까지 前近代의인 要素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獨逸의 近代化 過程은 跛行的인 一面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獨逸에 比하여 美國의 近代化는 市民革命과 産業革命이 다 같이 完成되었다는 의미에서 훨씬 順調로왔다. 美國은 英國의 延長線上에 있었기 때문에 文化的으로 英國과 다를 것이없었고, 傳受된 낡은 傳統의 障礙가 없었기 때문에, 近代化의 障礙要因이 그만큼 적었다. 그러나 美國의 獨立戰爭은 一種의 市民革命이었고, 거의 一世紀 후의 南北戰爭도 「準」 市民革命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美國의 資本主義가 발달하기 위하여는 奴隸身分制度가 撤廢되어야 했고 이러한 의미에서 南北戰爭은 美國의 近代化를 위해 필요한 戰爭이었다. 이렇게 볼 때, 美國의 近代化도 苦痛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III

알찌기 베버(M. Weber)는 近代化의 過程에 대한 그의 廣範圍한 研究의 결론의 하나로, 「오직 西洋에 있어서만」, 普遍妥當한 水準에 도달한 科學이 있고, 「오직 西洋에 있어서만」 合理的이고 體系的인 專門的 經營을 하는 사람, 즉 專門人이 있었다고 했다. 즉 사실 그는 近代化란 「오직 西洋에 있어서만」(Nur im Okzident) 可能하다고 본 것이다.

近代化의 물결이 東洋으로 波及되어, 日本이 非西洋地域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어느 정도 近代化에 成功하였다는 것은 刮目할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日本의 歷史的 經驗을 보아도 近代化의 길은 이 나라에 있어서도 平坦한 것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日本에 있어서도 産業革命은 비교적 쉽게 成就했으나 市民革命은 끝내 完全히 成就하지는 못했다. 眞正한 市民社會의 出現은 2次大戰의 終熄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日本은 德川幕府末期에 西歐의 挑戰에 對應하기 위하여 國論이 分裂하여 攘夷論과 開港論 사이에 一進一退의 激鬪가 일어났으나 內亂의 一步前에서 政府軍과 幕府 사이에 劇的인 타협이 이루어져서 明治維新을 실현시키는데 成功하였다. 明治維新은 3百年동안의 幕藩體制에 終止符를 찍고 封建身分制를 打破하고 近代統一國家를 確立하고 廣範圍하게 近代制度를 도입했다는 點에서 확실히 市民革命의인 一面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큰 變革이기는 했으나 完全한 것은 아니었다.

明治22年(1889年)에 伊藤博文 등의 主導下에 制定된 憲法은 天皇을 主權者로 하고, 天皇 밑에, 서로 獨立的인 立法, 司法, 行政의 各部를 두는 立憲主義를 採擇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立憲主義는 天皇中立主義의 原理에 傾斜한 것으로서, 民主主義와는 距離가 먼 것이었고 憲法發布 이후에는 天皇專制制에 反對하는 民主主義者는 個別的으로는 있어도 하나의 政治勢力으로서는 存在하지 않았다. 이른바 民權主義者는 있었으나, 그들도 民權 그 自體를 要求하는 것이 아니라, 民權의 伸張은 어디까지나 「國權」에 필요한 範圍內에서 要求하게 되었다. 國權을 民權 및 그 밖의 모든 要求에 優先시키고, 國權을 最高의 目的으로 하고 外交나 內政은 말할 것도 없고 經濟와 文化도 모두 國權의 確立과 擴張의 手段으로 삼는 것이 國權主義者였다. 따라서 明治初期에 進歩的이라고 할 수 있었던 國權主義者들은 日本國力의 伸張에 따라, 결국 안으로는 國粹主義者로, 밖으로는 帝國主義者로 變貌할 素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대부분은 그렇게 되었다. 마치 19世紀 後半期부터의 獨逸이 市民革命이 없이 産業化만으로 跛行的인 近代化의 길을 걸었듯이, 日本도 明治維新 이후로, 時日이 經過함에 따라 점차 軍國主義의 길을 걸었다. 一次大戰後에 이른바 「大正」데모크라시의 時代가 있기는 했으나, 그것은 곧 軍國主義의 行進 앞에 사라지고 말았다.

日本은 政治的으로는 天皇專制의 制度를 採擇하면서도 이른바 「和魂洋才」의 口號를 내걸면서, 廣範圍하게 西歐의 制度和 技術을 導入하여, 「富國強兵」을 目標로 하는 産業革命에는 큰 成功을 거두었다. 經濟發展의 樣相도 獨逸의 發展相과 一脈相통한 點이 있었다. 첫째, 日本의 經濟는 처음부터 軍事目的과 密接한 관계가 있었다. 한마디로 經濟는 帝國主義的 海外植民地奪取의 軍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運營되었다. 둘째, 日本에도 資本主義發展의 初期부터 産業의 集中度가 顯著하였다. 日本産業의

特徵은 財閥企業의 形成이다. 日本의 財閥은 모두 族閥에 의하여 所有되고 있었다는 獨逸의 경우와 좀 달랐으나, 이들이 軍部 및 官僚階級과 聯合되어 있었다는 點에서는 獨逸의 경우와 비슷했다.

IV

日本과 獨逸에 있어서의 「市民革命」은 他律的으로 二次大戰의 敗戰을 契機로 이루어졌다. 日本의 경우는 占領軍의 指示에 따라, 보다 直接的이고 他律的으로 民主化가 推進되었다. 이에 비해 獨逸에 대해서는 日本의 경우보다는 聯合軍의 直接的인 影響力의 行使는 적었지만, 결국은 聯合軍이 바라는 路線에 따라, 모든 戰後의 再建이 추진되었다. 戰前의 日本은 政治的으로는 軍部支配下에서의 權威主義的인 政體에 의하여 支配되고 있었고, 經濟的으로는 財閥에 의하여 寡占되고 있었으며, 社會的으로는 家父長的인 制度和 慣行이 都農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남아 있었다.

戰後에는 占領軍의 강력한 改革要求에 의하여 이러한 前近代의 要求가 一掃되었다. 美軍當局은 우선 當時의 日本政府로 하여금 新憲法을 強制的으로 採擇시킴으로써 明治以來의 天皇主權을 國民主權으로 轉換시킴으로써 民主化의 가장 큰 障礙를 除去하였다. 사실 美國으로서는 그 당시 日本의 天皇制를 廢止시킬 수 있는 千載一遇의 好機를 맞았으나, 그 制度는 결국 存置되었다. 農地改革은 農業의 發展을 沮害하였던 地主制를 撤廢하였고, 財閥의 解體는 族閥에 의한 產業의 支配를 없애고 獨寡占을 排除함으로써 眞正한 市場經濟秩序를 實現시켰다. 또 天皇家를 除外한 모든 貴族을 平民化시킴으로써, 封建的身分制度의 殘滓를 一掃하였다. 새로운 勞動立法은 勞動者들의 要求를 反映할 수 있는 채널을 制度化함으로써 產業民主主義를 實現시켰다. 民法改正은 傳統的인 家統制度를 없앴으로써 核家族制를 促進하였다.

이와 같은 廣範圍한 改革은 戰後의 日本社會로 하여금 戰前의 그것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日本은 비로소 市民社會가 된 것이다. 흔히 外國人들은 日本社會는 戰前에 있어서나 戰後에 있어서나 一貫성과 連續性이 있는 것으로 보는 傾向이 있다. 특히 日本人들은 過去를 保存하려는 강한 性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外國人들은 日本社會의 連續性에 강한 印象을 받기가 쉬운 것 같다. 그러나 戰後의 日本은 그 社會制度面에서는 戰前의 그것과는 거의 완전히 다른 社會를 이루고 있다. 日本은 새로운 民主制下에서 그들의 傳統的인 行動과 思考의 方式을 加味함으로써 오늘에 보는 經濟發展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獨逸의 경우에도 戰前과 戰後의 社會는 서로 엄청나게 다르다. 日本과 다른 點은 獨

逸의 경우에는 戰爭을 통하여 戰前의 支配階級이 거의 완전히 絶滅되었고 産業도 完全히 破壞되었을 뿐 아니라, 聯合國에 의한 國土의 分割占領으로 말미암아, 敗戰 獨逸은 거의 自動적으로 戰前과는 다른 모양을 하지 않을 수 없던 條件을 갖추고 있었다는 點이라 생각된다. 聯合國은 日本의 경우처럼 積極的인 介入을 하지 않고 獨逸의 自治力을 活用하는 方法을 썼다.

獨逸에는 다행히 戰後의 獨逸經濟를 再建할 理論을 준비한 少數의 學者들이 있었다. 나치治下의 오이켄(W. Eucken), 瑞西에 亡命했던 뢰프게(W. Röpke)와, 後에 이들의 理論을 實踐에 옮긴 에르하르트(L. Erhard)등으로 代表되는 이른바 「오르도學派」의 學者들이 이것인데, 이들은 從來의 權威主義的이고 集團主義的인 體制를 배제하고 分權的이고 民主的인 市場經濟體制를 確立해야 한다는 理論을 폈다. 이들의 理論은 말하자면 獨逸經濟再建의 理論이었다. 그들의 理論 —社會的 市場經濟理論—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詳論할 수는 없으나,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資本主義下에 있어서의 企業의 集中이나 社會主義下에 있어서의 集産主義的 統制 등을 反對하고, 眞正한 市場經濟를 確保할 것을 指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主要實踐項目으로는 (1)徹底하게 計劃經濟를 反對하고, (2)反獨占政策을 實施하고, (3)通貨安定政策을 固守하며, 케인즈式인 完全屬傭政策을 排除하고, (4)中産層의 育成을 指向한다는 등을 骨子로 한다. 여기서 오이켄이나 에르하르트의 經濟政策理論의 基本內容은 獨逸의 傳統的인 國家主義와 그것이 派生하는 「新重商主義」의 弊害로부터의 確固한 缺別을 提唱함으로써, 戰後 獨逸의 復興의 理論의 基礎가 되었다.

V

以上の 論議의 要點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先進國의 近代化過程을 보면, 市民革命의 두가지로 要約되는 社會全體의 變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둘째, 近代化의 發祥地인 英國과 프랑스에서는 産業革命보다 市民革命이 先行했으며, 後者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苦痛을 겪었다. 두 나라는 近代化를 위해, 過去의 前近代的인 要素를 果敢히 清算하였던 것이다.

셋째, 後發資本主義國인 獨逸과 日本은 産業革命은 「借入된 技術」의 利用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이루었으나, 市民革命은 끝내 自律적으로 完全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하여 獨逸과 日本에 있어서는 二次大戰前까지는 社會全般에 걸쳐 많은 前近代的인 要素가 남아있었고, 經濟構造도 獨逸에서는 카르텔이, 日本에 있어서는 財閥이 支配

的인 地位를 차지하고 있었다.

네째, 獨逸과 日本의 市民革命은 敗戰으로 因해, 他律적으로 이루어졌다. 戰後의 獨逸과 日本은 戰前의 그것과는 政治·社會 및 經濟構造에 있어서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兩國의 現在의 繁榮은 이러한 社會的 變革에 힘 입은 바 크다.

上記의 觀察에 妥當性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開途國에 어떤 示唆을 주는가.

第二次大戰의 終熄으로 해방된 대부분의 新生諸國은 解放 直後에는 獨立的 歡喜와 政治·社會의 混亂 때문에 近代化 作業을 能率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50年代 後半부터 漸次 民生의 安定의 重要性이 浮刻되고, 또 테크노크라트들이 出現함에 따라, 施政의 目標은 經濟建設에 두어지기 시작했다. 新生諸國에서는 蓄積된 資本도 거의 없었고 技術水準도 낮았으며, 管理能力을 갖춘 企業家도 적었다. 能動的으로 不足한 資源을 動員하고 意識적으로 發展을 推進할 수 있는 經濟主體는 政府밖에 없었다. 이 點에 있어서는 이들 新生國의 狀態는 거센크론이 19世紀末의 러시아에 關해서 記述한 것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後進國에 있어서는 例外없이 政府가 經濟發展을 主導하지 않을 수 없었다. 民主主義나 法治主義의 傳統이 없는 後進國에 있어서는 政府는 거의 例外없이 權威主義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 政府가 經濟發展의 主役의 役割을 맡게 됨에 따라 그 權威主義는 一層 強化되었다.

상당수의 開途國에서는 經濟建設에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고, 一部少數의 나라들은 新生工業國으로 浮上되었다. 이 나라들은 거센크론의 發展理論에 있어서와 같이 「借入된 技術」을 이용하여 急速히 工業國이 되었다. 低廉한 勞動力을 이 나라들의 工業으로 하여금 강한 國際競爭力을 가질 수 있게하여 輸出의 急激한 增加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經濟가 급속히 成長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나라들에 있어서도 社會의 發展은 踏步狀態에 있다. 파키스탄에서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東으로 보는 西로 보든— 政治적으로 成熟한 나라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中進國에 있어서는 아직 國家權力의 承繼問題를 확고하게 制度化하는데 成功한 나라는 하나도 없고, 南美에 있어서도 實情은 大同小異하다. 大部分의 나라에 있어서는 過去의 前近代의인 傳統을 清算하여 市民社會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 그 傳統의 內容은 물론 다르다. 南美의 反市民社會的 傳統은 世襲의 地主와 軍部の 支配이고 韓國이나 臺灣, 또는 싱가포르의 그것은 官導民卑의 專制主義의 傳統이다. 이와같이 後進地域의 傳統은 그 內容은 서로 다르나, 모두 市民社會와는 成就에는 障礙가 된다는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의인地位를 차지하고 있었다.

네째, 獨逸과 日本의 市民革命은 敗戰으로 因해, 他律的으로 이루어졌다. 戰後의 獨逸과 日本은 戰前의 그과와는 政治·社會 및 經濟構造에 있어서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兩國의 現在의 繁榮은 이러한 社會的 變革에 힘 입은 바 크다.

上記의 觀察에 妥當성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開途國에 어떤 示唆을 주는가.

第二次大戰의 終熄으로 해방된 대부분의 新生諸國은 解放 直後에는 獨立의 歡喜와 政治·社會의 混亂 때문에 近代化 作業을 能率的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50年代 後半부터 漸次 民生의 安定의 重要性이 浮刻되고, 또 테크노크라트들이 出現함에 따라, 施政의 目標은 經濟建設에 두어지기 시작했다. 新生諸國에서는 蓄積된 資本도 거의 없었고 技術水準도 낮았으며, 管理能力을 갖춘 企業家도 적었다. 能動的으로 不足한 資源을 動員하고 意識的으로 發展을 推進할 수 있는 經濟主體는 政府밖에 없었다. 이 點에 있어서는 이들 新生國의 狀態는 거센크로이 19世紀末의 러시아에 關해서 記述한 것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後進國에 있어서는 例外없이 政府가 經濟發展을 主導하지 않을 수 없었다. 民主主義나 法治主義의 傳統이 없는 後進國에 있어서는 政府는 거의 例外없이 權威主義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 政府가 經濟發展의 主役의 役割을 맡게 됨에 따라 그 權威主義는 一層 強化되었다.

상당수의 開途國에서는 經濟建設에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고, 一部少數의 나라들은 新生工業國으로 浮上되었다. 이 나라들은 거센크로이의 發展理論에 있어서와 같이 「借入된 技術」을 이용하여 急速히 工業國이 되었다. 低廉한 勞動力을 이 나라들의 工業으로 하여금 強한 國際競爭力을 가질 수 있게하여 輸出의 急激한 增加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經濟가 급속히 成長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나라들에 있어서도 社會의 發展은 踏步狀態에 있다. 파키스탄에서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一東으로 보는 것으로 보면 一政治的으로 成熟한 나라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中進國에 있어서는 아직 國家權力의 承繼問題를 확고하게 制度化하는 데 成功한 나라는 하나도 없고, 南美에 있어서도 實情은 大同小異하다. 大部分의 나라에 있어서는 過去의 前近代的인 傳統을 清算하여 市民社會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 그 傳統의 內容은 물론 다르다. 南美의 反市民社會的 傳統은 世襲的 地主와 軍部の 支配이고 韓國이나 臺灣, 또는 싱가포르의 그것은 官導民卑의 專制主義的 傳統이다. 이와같이 後進地域의 傳統은 그 內容은 서로 다르나, 모두 市民社會와는 成就에는 障礙가 된다는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지난날의 歷史가 앞으로의 後進國의 장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示唆라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産業革命이 自動的으로 市民革命을 갖다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市民革命을 完成시킬 수 있는 社會라면 産業革命은 無難히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逆은 眞이 아니다.

물론, 앞으로의 後進國의 歷史가 꼭 지난날의 先進國의 歷史를 되풀이하지는 않을런지 모른다. 經濟가 發展하면, 國民의 意識이 높아지고, 自然히 民主主義가 實現되고, 市民社會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期待가 혹은 實現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經濟發展이라는 것이 市民意識도 強化하는 要因도 되지만, 反市民社會的 要因도 強化할 수도 있다. 經濟만 發達하면 社會發展은 苦痛없이 이루어지리라는 期待에는 아무런 根據가 없다.

參 考 文 獻

- 1)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Vol. 11. "Material progress and World-Wide Problems, 1870~1898",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2) _____, Vol. 12. "The Shifting Balance of World Forces", 1898~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3) Wilhelm Röpke, *Civitas Humana, Grundfragender Gesellschaft und Wirtschaftsreform*, 1949 (日譯, 喜多村浩, ヒューマンズムの經濟學, 東京, 勁草書房, 1954.
- 4) _____ *A Humane Economy The Social Framework of the Free Market*, (獨逸語 標題: *Jenseis von Angebot und Nachfrage* 1958),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60.
- 5) 富永健一, 「戰後日本の 經濟發展과 社會變動」, KDI-NIRA 共同심포지움 論文, 1986.
6. 「近代化」理論の今日的 課題」, 『思想』, 730號, 1985, pp. 102-126.